

서해권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및 현장체감과제 발굴조사

윤영준·이상규·이채완·고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저자	윤영준·이상규·이채완·고지영			
내부연구진	연구책임자	윤영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어촌사회연구실
	공동연구원	이상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어촌사회연구실
	공동연구원	이채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어촌사회연구실
	공동연구원	고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연구부 어촌사회연구실

연구기간	2022. 01. 01. ~ 2022. 12. 31.
------	-------------------------------

보고서 집필내역

연구책임자	윤영준 연구총괄, 1장, 2장
내부연구진	이상규 2장, 3장, 4장
	이채완 3장
	고지영 1장, 2장

목차

01

서론 _1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3
1. 연구 목적	3
2. 연구 내용	3
제3절 선행연구 검토	5
1. 서비스기준 관련 연구	5
2. 현장체감과제 발굴 관련 연구	10

02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_13

제1절 연구 방법	13
1. 접근성 측정 및 점검방법	15
제2절 부문별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18
1. 섬어촌서비스기준 진단	18
2. 보건복지 부문	20
3. 교육문화 부문	29
4. 정주여건 부문	41
5. 경제활동 부문	50

03

현장체감과제 발굴 _53

제1절 연구 방법	53
제2절 서해권역 도서지역 현장실태	54
1. 충청남도	54
2. 전라북도	62

제3절 정책부문별 현장체감과제 분석·발굴	74
1. 보건·복지 부문	74
2. 교육·문화 부문	74
3. 정주여건 부문	75
4. 경제활동 부문	75
5. 삶의 질 현장체감과제 발굴	76

04 결론 및 정책제언_77

제1절 결론	77
제2절 정책제언	78

표 목차

〈표 1-1〉 연차별 평가 추진체계	4
〈표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6
〈표 2-1〉 섬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국가최소기준 및 목표치	14
〈표 2-2〉 섬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평가 방법 및 수단	16
〈표 2-3〉 섬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평가 결과	18
〈표 2-4〉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평가 결과	19
〈표 2-5〉 유인도서별 의료기관 분류	21
〈표 2-6〉 진료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22
〈표 2-7〉 유인도서별 응급이송 분석	24
〈표 2-8〉 응급의료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25
〈표 2-9〉 유인도서별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분류	27
〈표 2-10〉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28
〈표 2-11〉 유인도서별 초·중학교 분류	30
〈표 2-12〉 초·중학교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31
〈표 2-13〉 평생교육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33
〈표 2-14〉 서해권역 문화시설 분류	34
〈표 2-15〉 문화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35
〈표 2-16〉 문화 프로그램 및 공연 운영 현황	36
〈표 2-17〉 유인도서 읍면별 공공 도서관 분류	37
〈표 2-18〉 도서관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38
〈표 2-19〉 유인도서별 공공체육시설 분류	40
〈표 2-20〉 체육시설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41
〈표 2-21〉 주택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42
〈표 2-22〉 상수도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43
〈표 2-23〉 하수도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45
〈표 2-24〉 대중교통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47
〈표 2-25〉 방법설비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49
〈표 2-26〉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51

〈표 3-1〉 녹도 조사개요	54
〈표 3-2〉 고파도 조사개요	58
〈표 3-3〉 개야도 조사개요	62
〈표 3-4〉 연도 조사개요	66
〈표 3-5〉 비안도 조사개요	70
〈표 3-6〉 정책부문별 현장체감과제	76

그림 목차

〈그림 1-1〉 제3차·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비전체계 비교	9
〈그림 3-1〉 녹도 현장사진	55
〈그림 3-2〉 녹도 보건의료기관 및 헬기 이·착륙장	56
〈그림 3-3〉 고파도 현장사진	59
〈그림 3-4〉 고파도 기반 여건	61
〈그림 3-5〉 개야도 현장사진	63
〈그림 3-6〉 개야도 주거환경 현황	64
〈그림 3-7〉 개야도 어업생산기반 여건	65
〈그림 3-8〉 연도 현장사진	67
〈그림 3-9〉 연도 생활환경 현황	69
〈그림 3-10〉 비안도 현장사진	71
〈그림 3-11〉 비안도 주택 및 공터 현황	73

01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004년 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을 제정한 이후 정책목표, 대상, 범위, 거버넌스 등의 변화에 맞춰 4차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어촌·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간의 정책들이 어촌지역의 특성을 간과하고 농촌 지역 중심의 정책들이 진단과 평가가 주를 이루어 어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과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에서는 어촌특성을 반영한 삶의 질 진단과 평가를 위해 섬 어촌에 대한 세밀한 진단 및 평가를 추진해 다변화되는 새로운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섬 어촌은 국토 외곽지역으로서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삶의 질 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내륙과 격차가 큰 정책의 사각지대가 많으며,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어촌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정책의 발굴이 시급하다.

2020년 기준 전국 어촌의 77.4%는 지역소멸 위험지역이며, 특히 섬 어촌의 71.1%, 연안 어촌의 67.7%가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이다¹⁾. 이러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촌특성을 고려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주환경, 생활 서비스 등의 체계적인 진단 및 현장체감과제 발굴을 바탕으로 한 대응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농어촌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주요 공공서비스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0년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을 시행하였으며,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도입된 제도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항목과 목표 수준을 설정하여 국가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관리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섬 어촌의 삶의 질 격차는 농촌이나 연안 어촌에 비해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에도 어촌에 대한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제주권역에 이어 2022년 서해권역(충남·전북) 섬 어촌을 대상으로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및 공공서비스 달성 정도에 대한 권역별 조사를 추진하고, 2023년까지 전국 섬어촌의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2023년은 남해권역과 동해권역을 추진함으로써 전국 섬 어촌의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분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체감과제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 주도를 통한 정책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확대하여 향후 섬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추진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1) 조정희 외, 어촌지역소멸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연구,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1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 내용

1.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어촌주민들이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이행실태를 섬어촌서비스기준을 통해 점검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정책수요자 맞춤형 신규정책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섬 어촌을 대상으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평가 및 문제를 진단한다. 이를 통해 섬 어촌에 대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적용의 한계 및 정책 환류를 확인한다.

둘째, 입지 특성에 의해 정책의 사각지대화가 되어 버린 섬 어촌의 삶의 질 실태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주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신규 과제 발굴에 활용했으며, 정책화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셋째, 섬 어촌의 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직접 수렴해 정책과제로 발굴해내는 것은 삶의 질 정책의 성과를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운영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제4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연차별로 권역을 설정해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제2차 연도 제주권역을 시작으로, 서해권역, 남해·동해권역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제5차 연도는 전국 연안 지역의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3차 연도에 해당되며, 서해권역인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소재한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한다.

〈표 1-1〉 연차별 평가 추진체계

연차(연도)	추진 내용
제1차(2020년)	섬어촌서비스기준 필요성 검토
제2차(2021년)	제주권역
제3차(2022년)	서해권역
제4차(2023년)	남해·동해권역
제5차(2024년)	전국 연안 지역

자료: 저자 작성

본 연구는 전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목적, 연구 내용,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연구 방법을 담았다.

제2장에서는 섬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세부적인 이행실태 점검 결과와 달성 정도 평가 결과를 제시하고 평가상의 문제 진단 및 개선방안, 향후 평가계획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정책 부문별로 다양한 삶의 질 여건 및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문제 진단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여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과 섬어촌서비스기준 및 현장체감 과제 발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 서비스기준 관련 연구

1)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 도입 및 운용 현황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을 제정하고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공공서비스 공급기준을 마련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는 주민들이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권 내 주요한 생활서비스를 국토 어디에서나 누릴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하기 위한 국가의 공공서비스 공급 정책이다. 그리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public services)’를 의미한다.

정부는 2010년 「농어업인삶의질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핵심 항목 및 항목별 목표치 정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 시의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반영 등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여 최초 8대 부문 31개 항목으로 구성된 서비스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도입 이후 항목별로 여러 차례의 보완과 제도 개선 과정을 거쳐왔다. 2013년은 ‘안전’ 부문을 신설하고 핵심항목으로 ‘경찰순찰’을 추가하여 전체 9대 부문 32개 핵심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실효성 강화와 목표치 현실화를 위해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2015~2019)」 동안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함과 동시에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이원화하였다. 중앙정부는 7대 부문 17

개 핵심항목으로 조정하여 관리하고, 지방정부는 자율적으로 선택항목을 지정해 운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역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식이 중앙정부 주도로부터 거버넌스 중심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 및 정부의 생활SOC 확대를 고려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개편 및 이행실태 점검·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수행하였다.

개선된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의 4대 정책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서비스 항목을 구성해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서비스 항목은 총 19개 항목이다. 보건의료·복지 부문은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노인복지의 4개 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문화 부문은 초·중학교, 평생교육,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의 5개 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주여건 부문은 주택, 상수도, 하수도, 난방,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방범설비, 경찰순찰, 소방출동의 9개 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활동 부문은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농어촌서비스기준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부문	서비스 항목	목표치
보건·복지	가. 진료	내과, 외과, 산부인과 및 소아청소년과에 해당하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진료 여건 개선
	나.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 단축
	다. 영유아 보육·교육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라. 노인복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방문요양돌봄 등의 서비스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이용 가능성 제고
교육·문화	가. 초·중학교	1) 농어촌 지역 여건에 맞는 초·중등학교의 육성 2)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통학수단의 제공
	나. 평생교육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1조의3에

부문	서비스 항목	목표치
		따라 설치·지정된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가능성 제고
	다. 문화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및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이하 “지방문화원”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2) 공연장 및 지방문화원에서 관람·이용할 수 있는 공연 및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확충
	라. 도서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마.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정주 여건	가. 주택	1) 「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 제고 2) 슬레이트(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로 한정한다)가 사용된 주택 지붕의 철거·개량을 제고
	나. 상수도	상수도 보급률 제고
	다.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제고
	라. 난방	1)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 2)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엘피지(LPG) 소형 저장탱크 등을 활용한 가스 보급 확대
	마. 대중교통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노선버스(이하 “노선버스”라 한다)의 이용 편의성 제고 2) 노선버스의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도입 3) 도서지역의 경우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의 이용 편의성 제고
	바.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장소·설비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사. 방법설비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말한다)의 설치율 제고
	아. 경찰순찰	순찰 장소·시간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요청을 반영한 탄력적인 방식의 순찰 실시
	자. 소방출동	화재 발생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로 정해진 목표시간 이내에 화재 발생장소에 도착하는 비율 제고
경제 활동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창업·취업 관련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성 제고 2)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프로그램의 확충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1.06.22.>

2)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 개편 방향

기존 기본계획의 정책목표가 생활인프라 및 도농 간 격차 해소를 강조하였다면 「제4차 기본계획(2020~2024)」은 지역 내 인구 구조·사회적 변화에 따라 다변화되는 정책 수요 대응이 강조되어 농어촌서비스기준 개선을 통한 격차 완화와 수요 맞춤형 정책 수행이 중요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핵심항목 가운데 접근성 개념이 필요한 항목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접근성 개념을 적용하여 최소 접근시간 목표치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의 생활SOC 계획과 연계하여 도서관, 체육시설, 생활폐기물의 3개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에 비해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하고는 광대역통신망 항목의 달성정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해 서비스기준에서 제외되었다. 그 외 항목들은 기존의 측정방식과 지표를 유지하였다.

정책 대상에도 기존의 농어업인 중심에서 귀어귀촌인, 외국인종사자, 여성어업인 등으로 확대되어 농어촌의 다양한 세대·계층을 포용하고 있으며 정책 범위 역시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심에서 삶의 질과 관련한 전 부처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협업을 강조하고 부처 간 정책추진 및 제도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는 이와 같은 「제4차 기본계획」의 4개 영역 변화(정책목표, 대상, 범위, 거버넌스 등)에 맞춰 일부 항목의 보완 및 추가, 평가 활용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여 어촌·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의 추진 방향에 대응하고 있다.

〈그림 1-1〉 제3차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비전체계 비교

	제3차 기본계획	제4차 기본계획
목표	생활인프라 및 도·농 간 삶의 질 격차 완화	농어촌 지역 내 격차 해소, 다변화되는 정책 수요 대응
대상	농어업인 중심	농어촌의 다양한 세대·계층 포용
범위	농식품부, 해수부 정책 중심	관련 쏠 부처 협업 추진체계 내실화
거버 넌스	단위 사업별 관리 중앙정부 주도	통합적 지원을 위한 플랫폼 중앙과 지방, 민과 관의 협치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1),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점검-제주권역 보고서”

3)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의 차별성

본 연구는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 하에서 도서라는 입지 특성에 따라 정책 사각지대화가 발생하고 있는 섬 어촌의 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점검 결과를 농어촌서비스기준 결과와 비교하였다. 지역 격차가 지리적 입지 특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역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세부적인 맞춤형 정책추진 및 전략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섬 어촌은 초저출산, 초고령화 등으로 급속한 지역소멸 위험지역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업의 전진기지, 해양영토 수호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공익적·공공적 기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지역소멸지역의 실태를 조명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2. 현장체감과제 발굴 관련 연구

송미령 외(2014)는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 연구에서 2005년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 제정되고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조정 기능 한계 및 관계부처 참여 부족, 농어촌 인지적 관점의 정책 수립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3차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제 중심의 계획 수립과 2차 기본계획에서 부족했던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민 의견에 부합하는 단기적인 정책보다는 농업·농촌 발전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삶의 질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상시적인 농어촌 현장의 의견수렴 및 정책 환류 방안을 제안하였다.

성주인 외(2015)는 협업과 현장 공감으로 행복한 농어촌 구현 연구에서 농촌의 시장개방 가속화, 고령화, 도농 간 소득격차 그리고 농업 내부의 계층 간 소득격차 증대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농어촌 주민이 무력감과 좌절을 느끼는 상황을 지적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체감형 삶의 질 과제 발굴을 제안하였다. 과제 발굴에는 i) 농어촌 고령인구 사회복지 수요 파악 및 기존 서비스 개선 및 신규 복지서비스 발굴, ii)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가치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과 도농 간 교육 서비스 격차 해소 교육 개발, iii) 문화예술인의 귀농·귀촌 등 농업·농촌의 문화·예술 창조공간으로 발전 방안 모색, iv) 6차 산업화 선진사례 참고를 통한 도농 간 산업의 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 마련 v) 청년 집단과 귀농·귀촌인 등 새로운 집단들을 위해 현실적으로 따를 수 있는 매뉴얼 개발, vi)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농촌 교통 인프라 개선 노력 필요 등을 제시하였다.

송미령 외(2022)의 신 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활성화 연구에서 도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장소로 농촌에 대한 지향성이 강해 농촌 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을 찾고자 하였다. 이에 농촌을 무대로 자아실현 증대 등 트렌드 변화 및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정주인구(Stock)를 넘어 교류인구·관계인구(Flow)를 고려하여 농촌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를 발굴하였다. 추진 과제에는 i) 공간계획 기반 농촌자생 추진, ii) 농촌마을 인프라 혁신, iii) 농촌 자원 활용 경제 활성화, iv) 도농 상생 교류 확대, v) 농촌재생을 위한 추진 기반 구축 등이 있다.

02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제1절 연구 방법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은 농촌과 어촌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최소기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농어촌서비스기준 서비스 항목을 일차적으로 준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는 평가 단위가 시·군 단위로 농촌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장점이 많으나, 어촌은 평가 단위가 지역에 따라 읍면 단위이거나 행정리 단위인 곳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항목 내용에 따라 현장의 구체적 실태 파악이 가능한 것은 읍면 단위 이하 수준에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섬어촌서비스기준 및 목표치는 아래 <표 2-1>과 같다.

〈표 2-1〉 섬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국가최소기준 및 목표치

부문	핵심항목	세부시설 및 측정기준	목표 (20~24년)
보건·복지	가. 진료	민간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30분~1시간
	나.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도착하여 응급처치서비스를 받거나 응급이송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0분
	다. 영유아 보육·교육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20분
	라. 노인복지	독립적 일상생활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80%
교육·문화	가.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학교를 육성하고 통학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0분
	나. 평생교육	읍·면 내 평생교육 거점시설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70%
	다. 문화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40분
	라. 도서관	국공립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10분
	마. 체육시설	생활체육수요 충족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30분
정주·여건	가. 주택	농어촌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지붕은 철거 혹은 개량한다.	23%
	나.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85%
	다.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76%
	라. 난방	읍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68%
	마.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농어촌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00%
	바. 생활폐기물	행정리 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마을 내
	사. 방범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한다.	60%
	아. 경찰순찰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 시간·장소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탄력 순찰을 실시한다.	100%
	자.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	70%
경제·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86%

자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1.06.22.〉

1. 접근성 측정 및 점검 방법

본 연구에서 목표치의 접근성 측정은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의 목표치를 준용하였다. 이에 따라 섬어촌서비스 항목의 목표치는 항목별로 각각 진료 30분~1시간, 응급의료 30분, 영유아 보육교육 20분, 초·중학교 10분, 문화 40분, 도서관 10분, 체육시설 30분이다.

농어촌서비스기준 측정방법은 5년 주기 농림어업총조사 자료에 근거하고 있고, 농촌의 경우 이동 수단은 승용차량을 전제로 평균 이동시간을 측정하고 있어 정밀한 접근성을 측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어촌지역 중에서도 섬 지역은 버스노선이 없거나 주민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등 다양한 일괄 적용하여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동 시간의 측정은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발지와 도착지를 설정해 인터넷 포털의 지리정보서비스²⁾를 이용하였다.

달성 정도 평가는 전년도³⁾ 보고서를 준용하여 섬 어촌 생활의 중심인 기항지에서 서비스 시설까지의 평균 접근 거리, 시간, 비용을 산출하였다. 서비스 시설이 육지에 있는 경우는 육지 기항지 도착 시 교통변화를 반영하여 배 도착시간에 맞춰 육지 기항지로부터 서비스 시설까지를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섬 내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은 도보와 승용차로 구분하였으며, 교통수단이 있는 지역은 대중교통과 승용차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비용은 교통수단별로 산출하였다. 배는 도서별 여객선 및 도항선의 운임을 적용하였으며, 대중교통은 버스 운임, 승용차는 택시 운임을 적용하였다.

2) 카카오 맵 서비스를 이용.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2021),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점검-제주권역 보고서”, p16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방법은 서비스기준 항목별 공식 통계와 지자체 행정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해 측정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2-2>와 같다.

〈표 2-2〉 섬어촌서비스기준 항목별 평가 방법 및 수단

부문	핵심항목	세부항목	평가방법	평가수단	비고
보건·복지	가. 진료	민간·공공 의료기관	접근성 측정방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 데이터	수단별 시간비용 추가
	나. 응급의료	응급상황 대응	유인도서별 해경 현장 도착 평균소요시간	충남·전북 해양경찰서 응급 환자 이송 관련 출동 기록, 행정자료협조조사	섬별, 월별, 수단별 구분
	다. 영유아 보육·교육	어린이집, 유치원	접근성 측정방식	어린이집, 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주소 검색,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현황 행정자료	
	라. 노인복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률	지역별 지자체 행정조사	접근 불가
교육·문화	가. 초·중학교	초·중학교	접근성 측정방식, 통학수단 제공비율	교육통계서비스 초·중학교, 교육부 학교별 통학수단 현황	수단별 시간비용 추가
	나.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	비형식평생교육시설 읍면 비율	비형식평생교육기관 현황, 평생교육시설 전화조사,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전화조사	-
	다. 문화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접근성 측정방식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 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등의 문화시설 위치정보 (한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수단별 시간비용 추가
교육·문화	라. 도서관	도서관	접근성 측정방식	국가도서관 통계시스템 제공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위치정보	공공도서관 수단별 시간비용
	마. 체육시설	생활체육관, 수영장, 경기장	접근성 측정방식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 수영장 체육시설 위치정보	수단별 시간비용 추가
정주 여건	가. 주택	최저주거기준, 석면 슬레이트 주택지붕	시군별 최저주거기준 이상 가구비율, 슬레이트 주택 수 변화율	국토부 건축물대장 표제부, 환경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연도별 슬레이트 소재 주택 철거 실적 자료	
	나. 상수도	-	도서지역 광역·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비율	환경부 상수도통계 급수인구 현황	-

부문	핵심항목	세부항목	평가방법	평가수단	비고
	다. 하수도	-	도서지역 공공하수처리 인구비율	환경디지털도서관 하수도통계	-
	라. 난방	-	읍 지역도시가스 보급 가구비율, 소형LPG 저장 탱크 공급마를 가구비율	제주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 보급 가구 현황, 한국LPG 산업협회	접근불가
	마. 대중교통	-	일일 버스운행 3회 이상 법정리 비율, 도서지역 여객선 운행현황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빅데이터 거래소 버스노선 및 버스정류장 위치 정보	-
	바.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행정리 비율	지자체 행정조사	-
	사. 방법설비	-	방법용 CCTV 설치 행정리 비율	광역시지자체, 기초지자체 행정리별 방법용 CCTV 현황	-
	아. 경찰순찰	-	주민요청 순찰 시간장소 일일 1회 이상 탄력순찰	경찰청 시군별 탄력순찰 대상 지역 및 실시 현황	접근불가
	자. 소방출동	-	섬별 화재출동	광역시도 소방본부 일일상황보고, 해당 도서지역 관할 읍면 119센터, 지역센터 화재대응실적 추적	발생건수, 월, 내용, 소실액, 진화시간
경제 활동	창업·취업 컨설팅·교육	-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 센터 유무, 일자리지원센터 유무, 창업·취업 상담 전문인력 수, 창업·취업 전문프로그램 연간 운영	기초지자체, 시도 행정조사	-

자료 : 저자작성

제2절 부문별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1. 섬어촌서비스기준 진단

서해권역(충남·전북) 유인도서에 대한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19개 주요 공공서비스 핵심항목 가운데 2개 항목만 목표치를 달성해 공공서비스 이행실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섬어촌서비스기준 부문별 평가 결과

정책부문	평가항목 수	달성 수(항목)	미달성 수(항목)	점검불가 수(항목)
보건·복지	4	-	3	1 (노인복지)
교육·문화	5	1 (평생교육)	4	-
정주여건	9	-	6	3 (난방, 경찰순찰, 소방출동)
경제활동	1	-	1	-
합계	19	1	14	4

자료: 저자 작성

섬어촌서비스기준에서 제시한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를 달성한 서비스 항목은 교육·문화 부문의 평생교육 항목이었다.

섬어촌서비스기준에서 제시한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서비스 항목은 보건·복지 부문의 진료, 응급의료, 영유아 보육교육의 3개 항목, 교육·문화 부문의 초·중학교,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의 4개 항목, 정주여건 부문의 주택, 상수도, 하수도, 대중교통, 생활폐기물, 방범설비 항목의 6개 항목, 경제활동 부문의 창업·취업 컨설팅 교육의 1개 항목 등 총 14개 항목이다.

보건·복지 부문의 노인복지 항목, 정주여건 부문의 난방, 경찰순찰, 소방출동 3개 항목 등 총 4개의 서비스 항목은 점검 및 자료 구득 불가로 평가를 수행할 수 없었다.

정책부문별로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부문별 서비스 항목 달성 정도가 매우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접근성 측정방식을 적용한 6개의 서비스 항목(진료, 영유아 보육·교육, 초·중학교, 문화, 도서관, 체육시설) 가운데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를 달성한 서비스 항목은 없어 접근성에 있어 섬 어촌 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2-4〉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평가 결과

정책 부문	핵심항목	목표치(20~24년)	평가 결과	달성 여부
보건·복지	가. 진료	30분~1시간	88.8분	X
	나. 응급의료	30분	31.0분	X
	다. 영유아 보육·교육	20분	52.9분	X
	라. 노인복지	80%	-	점검불가
교육·문화	가. 초·중학교	10분	57.6분	X
	나. 평생교육	70%	90.9%	O
	다. 문화	40분	96.5분	X
	라. 도서관	10분	93.5분	X
	마. 체육시설	30분	119.2분	X
정주여건	가. 주택	23%	-7.2%	X
	나. 상수도	85%	26.3%	X
	다. 하수도	76%	24%	X
	라. 난방	68%	-	점검불가
	마. 대중교통	100%	11.1/86.5%	X

정책 부문	핵심항목	목표치(20~24년)	평가 결과	달성 여부
	바. 생활폐기물	마을 내 (생활/영농 100%)	14.8%	X
	사. 방범설비	60%	34.6%	X
	아. 경찰순찰	100%	-	점검불가
	자. 소방출동	70%	-	점검불가
경제 활동	창업·취업 건설·탕·교육	86%	78%	X

주: 달성여부에서 O는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달성, X는 미달성을 뜻함
자료: 저자 작성

2. 보건·복지 부문

1) 진료

민간·공공의료기관을 통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 진료가 가능하다.

(1) 평가 방식

서해권역(충남·전북) 유인도서를 시·군별로 분류하고 진료 항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주요 진료과목으로 설정하여 섬 어촌 주민의 접근성을 측정하여 달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서해권역 유인도서 및 유인도서와 연계된 육지의 기항지를 출발지로 지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소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의료기관 및 민간의료기관의 위치정보를 도착지로 지정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평균 이동 거리, 평균 이동시간, 평균 소요 비용을 측정하였다.

이동 거리는 이동 수단별로 대중교통과 승용차(택시 포함)로 분류하여 운행 거리를 적용하였다. 이동시간은 이동 수단별 소요 시간을 적용

하였다. 소요 비용은 바다의 경우 선박 운임, 육지의 경우 이동 수단별 운임을 적용하였다.

의료기관의 범위는 해당 유인도서 및 유인도서 육지 기항지 읍면동 단위
에 소재한 의료기관이다. 평가에 적용된 의료기관은 전체 185개소이며, 이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은 37개소, 민간의료기관이 148개소였다.

진료 항목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는 진료를 원하는 의료기관까지 평균
30분~1시간으로 이내에 도착하면 섬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섬은 지리적으로 접근시간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섬별 평균 접근시간, 이동 거리, 소요 비용을 분석하여 평가하였다.

〈표 2-5〉 유인도서별 의료기관 분류

단위: 개

유인도서		공공	민간				합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충남	당진시	2	2	2	2	2	10
	보령시	12	12	12	12	12	60
	서산시	1	1	1	1	1	5
	서천군	3	3	3	3	3	15
	태안군	2	2	2	2	2	10
	홍성군	1	1	1	1	1	5
전북	고창군	1	1	1	1	1	5
	군산시	9	9	9	9	9	45
	부안군	6	6	6	6	6	30
합계		37	37	37	37	37	185

자료: 저자 작성

(2) 평가 결과

이동 수단별로 주민들이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까지 이동하는 평균 이동거리는 21.7km이다. 섬 내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만 있어 진료를 위해서는 육지로 이동해야한다. 권역별 평균 이동거리의 편차도 크다. 평균 이동거리가 가장 짧은 권역은 충남 서천군 17km 인데 반해 전북 부안군은 64km로 가장 길다. 의료기관까지 소요되는 평균 이동시간은 68.6분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68.9분, 승용차 이용 시 68.4분이 소요되어 차이가 크지 않다. 평균 이동시간이 가장 짧은 지역은 충남 서천군으로 승용차 19.9분, 대중교통 21.7분이 소요되며, 가장 오래 걸리는 권역은 전북 군산으로 승용차 57.5분, 대중교통 이용시 평균 60분 이상이 소요되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더욱이 측정치는 평균값으로 실제 이동 시 환승, 대기시간 등 운항 시간이 추가되어 평균 이동시간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기관까지의 평균 소요비용은 1회 편도 기준 대중교통 3,038원, 승용차 26,414원이다. 권역별로는 충남 서천군이 대중교통 이용 시 1,550원으로 가장 적게 지출하고, 충남 태안군은 승용차 이용 시 38,140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다. 비용 역시 평균값으로 배 운임이 고정적으로 지출되고 있어 실제 이동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2-6〉 진료 항목 섬여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km, 분, 원

유인도서		평균 이동거리		평균 이동시간		평균 소요비용	
		대중교통	승용차	대중교통	승용차	대중교통	승용차
평균		23.0	20.3	68.9	68.4	3,038	26,414
충남	당진시	29.5	25.1	62.0	54.6	3,450	29,660
	보령시	13.3	13.8	55.3	49.2	3,357	18,953
	서산시	20.9	20.3	69.0	67.8	2,307	27,407

전 북	서천군	9.0	8.0	21.7	19.9	1,550	38,100
	태안군	23.1	26.4	45.2	64.2	2,845	38,140
	홍성군	23.4	18.7	49.8	49.9	3,620	26,780
	고창군	25.4	18.7	42.8	39.9	1,760	25,340
	군산시	27.2	23.4	153.5	150.7	5,636	24,266
	부안군	35.0	29.0	121.0	119.4	2,820	35,840

주1: 평균 이동거리에서 전체 이동거리가 더 짧은 것은 섬 내 의료기관 이용에 의한 편차에 의한

주2: 평균 이동시간, 평균 소요비용은 여객선 및 도항선 이용을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임

주3: 평균 소요비용은 1회 편도 기준

자료: 저자작성

2) 응급의료

응급환자 발생 시 기본적인 응급장비가 마련되고 전문인력이 동승한 구급차가 도착하여 응급 처치서비스를 받거나 응급이송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평가 방식

섬어촌 어업인 일터의 특성상 육지보다 해상에서 응급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민간어선, 연안구조정, 고속단정, 함정, 헬기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이용한 응급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응급의료 항목은 ‘시군별 해경 현장 도착 평균 소요 시간’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달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해양경찰서 관내 유인도서 응급환자 발생 출동 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전체 응급이송 출동 건수는 61건이며 충남 보령시와 전북 군산시 응급이송 건이 49건으로 전체 출동 건수의 80.33%를 차지하고 있다. 총 응급 환자 수는 63명으로 대다수가 주민이다. 대부분의 배를 이용하여 이송하였다.

현장 도착 평균 소요 시간은 국가최소기준 목표치인 30분 이내면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구득 자료로부터 응급환자의 특성과 숫자, 응급이송 사유, 이송수단과 인계지, 이송 요청 시각과 현장 도착 시각, 인계 시각, 도착 소요시간을 분석하였으며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을 산출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표 2-7〉 유인도서별 응급이송 분석

단위: 건, 명

유인도서		응급이송	응급환자	환자 특성		이송수단	
				주민	외부인	배	헬기
충남	보령시	37	39	31	6	34	3
	서산시	1	1	1	-	1	-
	서천군	1	1	1	-	-	1
	홍성군	1	1	1	-	1	-
	태안군	5	5	3	2	5	-
전북	군산시	16	16	9	7	15	1
합계		61	63	46	15	42	19

자료: 저자작성

(2) 평가 결과

전체 응급이송 요청 건수 61건 가운데 목표 시간 30분 이내 도착한 경우는 33건으로 전체의 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도착 평균 소요시간은 30.1분으로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섬어촌은 지리적 특성상 현장 평균 도착시간의 편차가 크다. 응급상황 건수별 목표 달성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비율은 54.1%였다. 섬별로 살펴보면 충남지역 홍성군과 태안군은 평균 이상의 달성률이나,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는 평균 이하였다. 특히 전체 출동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충남 보령시와 전북 군산시 모두 평균 도착시

간과 달성 비율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여 응급의료에 대응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8〉 응급의료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분, 건, %

유인도서	평균 도착시간	목표 달성 지역	
		달성 건 수	달성 비율
평균	30.1	33/61	54.1
충남	보령시	27.0	21/37
	서산시	50	0/1
	서천군	35	0/1
	홍성군	9	1/1
	태안군	13.8	5/5
전북	군산시	45.7	6/16
			37.5

주1: 평균 이동거리에서 전체 이동거리가 더 짧은 것은 섬 내 의료기관 이용에 의한 편차에 의한

주2: 평균 이동시간, 평균 소요비용은 여객선 및 도항선 이용을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임

주3: 평균 소요비용은 1회 편도 기준

자료: 저자작성

3) 영유아 보육교육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수 있다.

(1) 평가 방식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은 접근성 개념으로 측정하여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는 20분 이내 도착하면 섬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달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동 거리는 해상의 경우 여객선 및 도선의 운항 거리, 육지의 경우 기항지에서 영유아 보육교육시설까지의 거리를 적용하였다. 이동시간은 해상은 운항 시간을 적용하고, 육지

의 경우 승용차 이용 시 소요 시간을 적용하였다. 소요 비용은 해상의 경우 선박 운임을 적용하고, 육지의 경우에는 통학 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통학 차량은 일정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실제 평균 이동시간은 본 연구의 적용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권역(충남·전북) 유인도서 및 유인도서와 연계된 육지의 기항지를 출발지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주소 검색 및 각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현황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위치 정보를 도착지로 지정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평균 이동 거리, 평균 이동시간, 평균 소요 비용을 측정하였다.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범위는 해당 유인도서 및 유인도서 육지 기항지 읍면동 단위에 소재한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다. 평가에 적용된 전체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은 37개소로 시설분류별로 국공립 27개소, 법인단체 5개소, 사회복지법인 1개소, 민간 3개소, 가정 1개소였다. 이 가운데 국공립 4개소(충남 1개소, 전북 3개소)는 현재 휴원중이며, 저녁 돌봄까지 제공하는 유치원은 국공립 1개소로 확인되었다.

〈표 2-9〉 유인도서별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분류

단위: 개

유인 도서	전체	국공립	공립 병설	법인 단체	사립 법인	사회복 지법인	민간	가정
합계	37	27	-	5	-	1	3	1
충 남	당진시	2	-	2	-	-	-	-
	보령시	12	9	3	-	-	-	-
	서산시	3	1	-	-	-	2	-
	서천군	1	-	-	-	-	1	-
	태안군	2	1	-	-	1	-	-
	홍성군	1	1	-	-	-	-	-
전 북	고창군	1	-	-	-	-	-	1
	군산시	9	9	-	-	-	-	-
	부안군	6	6	-	-	-	-	-

자료: 저자작성

(2) 평가 결과

섬 주민이 영유아 보육교육시설까지 이동하게 되는 평균 이동거리는 8.1km이다. 충남지역 보령시와 전북 지역 군산시, 부안군은 섬 내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을 소재하고 있고, 평균 이동 거리는 1.0km에 불과하지만,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섬 내 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육지 소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최소기준 목표치가 20분인데 반해 영유아 보육교육시설까지 소요되는 평균 이동시간은 52.9분이 소요되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섬 내 소재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평균 이동시간은 2.8분이 소요되어 목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에서는 통학 차량을 이용하여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배 운임은 고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적용된다. 배 운임은 도서민 할인 적용 시 섬별로 1,000원~5,000원을 지불하고 있어 1회 편도 기

준으로 평균 3,700원 정도의 운임이 발생한다.

평가에 적용되는 전체 영유아 보육교육 시설 37개소 중 목표 시간 20분 이내 도착한 경우는 11개소로 목표 달성 비율은 29.7%였다. 시군별 섬별로 살펴보면 충남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태안군과 전북 군산시, 부안군이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표 2-10〉 영유아 보육교육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km, 분, 원, %

유인도서	평균 이동거리		평균 이동시간		평균 소요비용		달성 비율
	전체	섬 내	전체	섬 내	전체	섬 내	
평균	8.1	1.0	52.9	2.8	7,308	-	29.7
충 남	당진시	5.8	-	29.2	-	8,150	0.0
	보령시	3.3	0.7	32.6	3	5,350	25.0
	서산시	12.9	-	42.0	-	12,067	100.0
	서천군	8.9	-	19.7	-	7,600	0.0
	태안군	9.7	-	31.2	-	6,550	100.0
	홍성군	4.7	-	17.8	-	6,000	100.0
전 북	고창군	2.5	-	6.5	-	4,000	22.2
	군산시	12.6	0.3	104.9	1	9,211	50.0
	부안군	10.4	2.1	55.2	4.5	6,850	-

주1: 전체 평균 이동시간 및 소요비용은 여객선 및 도항선 이용을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임

주2: 평균 소요비용은 1회 편도 기준

자료: 저자작성

4) 노인복지

독립적 일상생활 제한이 있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섬어촌 지역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노인복지 항목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한다. 즉, 유인도서 소재 읍면 단위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수의 총합의 비율을 통해 측정한다.

평가 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주요통계,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시설 현황, 지자체 행정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할 수 있었지만 관련 기관 자료 미제공으로 본 연구에서는 평가가 불가하였다.

3. 교육문화 부문

1) 초중학교

지역여건에 맞는 농어촌 초중학교를 육성하고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적절한 통학수단을 제공한다.

(1) 평가 방식

초·중학교 항목은 접근성 개념을 사용하여 유인도서 관할 읍면동 내 초·중학교'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였다. 섬어촌서비스기준의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국가최소기준의 목표치 10분을 기준으로 달성도를 판단했다. 자료는 교육부 초·중학교 현황 및 주소록과 학교별 통학 수단

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 이동 거리, 평균 이동시간, 평균 소요 비용을 측정했다. 이동 수단에서 초·중학교는 통학 차량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동 거리는 해상은 여객선 및 도선의 운항 거리, 육지는 기항지에서 초·중학교까지의 거리를 이동 수단별로 도보는 도보거리, 대중교통과 승용차는 운행 거리를 적용하였다. 이동시간은 해상은 운항 시간, 육지의 경우 이동 수단별 소요 시간을 적용하였다. 소요 비용은 해상은 선박 운임을 적용하고, 육지는 이동 수단별 운임을 적용하였다.

초·중학교의 범위는 해당 유인도서 및 유인도서 육지기항지 읍면동 단위
에 소재한 초·중학교가 대상이다. 평가에 적용된 초·중학교는 전체 74개소
이며, 초등학교가 37개소, 중학교가 37개소였다. 초등학교 가운데 충남지
역에는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홍성군 등 8개소의 분교가 있고, 전북 지
역에는 군산시에 2개의 분교가 있다.

〈표 2-11〉 유인도서별 초·중학교 분류

단위: 개

지역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분교	
합계		27	10	37
충남	당진시	1	1	2
	보령시	7	5	12
	서산시	2	1	3
	서천군	1	-	1
	태안군	1	-	1
	홍성군	1	1	2
전북	고창군	1		1
	군산시	7	2	9
	부안군	6		6

자료: 저자작성

(2) 평가 결과

섬 주민이 초·중학교까지 가는 평균 이동 거리는 18km이고, 초등학교는 평균 이동거리가 16km, 중학교는 21km로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해상을 제외하고 육지 기항지에서 초·중학교까지의 평균 이동 거리는 5.9km로 초등학교가 6.6km, 중학교가 5.5km이었다.

섬 어촌 지역은 해상이 있어 지역별, 이동 수단별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초·중학교 항목의 평균 이동시간은 57.6분으로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10분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54분이 걸리고, 중학교는 61.3분이 걸려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동 수단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13.1분이 소요되고, 승용차 이용 시에는 11.1분이 소요되어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소요 비용은 초·중학교 1회 편도 기준 평균 9,764원이 소요된다.

〈표 2-12〉 초·중학교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km, 분, 원

유인도서		이동거리			이동시간			소요비용		
		평균	초등	중학교	평균	초등	중학교	평균	초등	중학교
합계		18	16	21	57.6	54.0	61.3	9,764	8,694	10,776
충남	당진시	15	7	23	27.3	24.2	30.3	10,700	9,000	12,400
	보령시	16	7	25	32.0	19.3	44.7	5,913	3,050	8,775
	서산시	22	27	17	57.9	53.9	61.9	20,967	17,100	24,833
	서천군	6	6	6	6.6	6.3	6.9	3,300	3,300	3,300
	태안군	4	2	6	32.4	28.3	36.6	7,600	5,000	10,200
	홍성군	4	2	7	23.1	17.8	28.4	9,250	5,800	12,700
전북	고창군	29	32	26	55.9	61.5	50.3	42,900	47,700	38,100
	군산시	23	26	21	117.2	131.3	106.2	10,238	11,914	8,933
	부안군	23	24	23	63.2	64.4	62.0	7,283	8,033	6,533

주1: 동일 기항지 이용, 분교 포함 등으로 함께 이동거리와 섬별 이동거리의 평균이 다름

주2: 평균 이동시간, 평균 소요비용은 여객선 및 도항선 이용을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임

주3: 평균 소요비용은 1회 편도 기준

자료: 저자작성

2) 평생교육

읍면 내 평생교육 거점시설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 평가 방식

평생교육기관에는 공식 학교시설을 의미하는 준형식 평생교육기관과 학교 외 시설을 의미하는 비형식 평생교육기관⁴⁾으로 나뉜다. 농어촌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기관은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 항목은 ‘주민센터를 포함한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읍면 비율’을 측정하여 달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읍면별 주민자치센터 포함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읍면의 수를 측정했다.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는 전체 읍면 가운데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이 있는 읍면 비율이 70% 이상이면 평생교육 항목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해권역 유인도서 소재 읍면의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은 충남지역이 총 10개소이고, 전북 지역이 2개소이다. 이 가운데 전북 군산시의 경우 평생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평생학습센터는 충남지역이 8개소이고, 전북 지역이 2개소이다.

(2) 평가 결과

서해권역에서 평생교육기관 미설치인 전북 군산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13개소의 비형식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전북 지역은 고창군, 부안군에서 평생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있지만 고창군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북 부안군과 충남 지역 시군별 유인도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달성 비

4) 「평생교육법」 제30조부터 제38조의 평생교육시설과 동법 제21조의3의 주민자치센터 등의 평생학습센터시설을 비형식 평생교육 거점시설로 정의하고 있음

율이 90.9%에 해당하므로 서비스기준을 달성하였다.

〈표 2-13〉 평생교육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개, %

행정구역	시군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수	운영실적	달성률
충남	당진시	석문면 주민자치센터	28	28	100
	보령시	오천면 주민자치센터	100	76	76
		삼시도 평생학습센터 녹도 평생학습센터			
	서산시	지곡면 주민자치센터 팔봉면 주민자치센터	44	43	98
	서천군	장항읍 주민자치센터	20	20	100
	태안군	안면읍 주민자치센터	13	13	100
		근흥면 주민자치센터			
전북	홍성군	서부면 주민자치센터	10	10	100
	고창군	부안면 주민자치센터	-	-	-
	군산시	미설치	-	-	-
	부안군	위도면 주민자치센터	30	24	80

주: 운영실적은 연초 계획한 프로그램 수 중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프로그램 수의 비율
자료: 저자작성

3) 문화

시군 내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에서 월 1회 이상 문화프로그램과 분기별 1회 이상 전문 공연 프로그램을 관람할 수 있다.

(1) 평가 방식

문화 항목은 ‘시군 내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여 달성정도를 평가했다. 서해권역(충남·전북) 유인도서 및 유인도서와 연계된 육지의 기항지를 출발지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예술회관 및 지방문화원 등의 문화시설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평균 이동 거리,

평균 이동시간, 평균 소요 비용을 측정했다.

접근성 개념을 적용한 문화 항목의 국가최소기준의 목표치는 40분으로 이내에 도착하게 되면 섬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 거리는 해상의 경우 여객선 및 도선의 운항 거리, 육지의 경우에는 기항지에서 문화시설까지의 거리를 이동 수단별로 도보는 도보 거리, 대중교통과 승용차는 운행 거리를 적용하였다. 이동시간은 바다의 경우 운항 시간, 육지의 경우 이동 수단별 소요 시간을 적용하였다. 소요 비용은 해상의 경우 선박 운임을 적용하고, 육지의 경우에는 이동 수단별 운임을 적용하였다.

문화시설의 범위는 해당 유인도서가 있는 시군 단위에 소재한 문화시설이 대상이다. 평가에 적용된 문화시설은 총 19개소로 문화예술회관 7개소, 지방문화원 12개소였다.

〈표 2-14〉 서해권역 문화시설 분류

단위: 개

행정구역	문화예술회관	지방문화원
합계	7	12
충청남도	4	9
전라북도	3	3

자료: 저자작성

(2) 평가 결과

섬 주민이 문화시설까지 가는 평균 이동 거리는 42.1km이다. 해상의 평균 이동 거리는 16.9km, 육지에서의 평균 이동 거리는 25.7km이었다. 권역별로는 전북 부안군이 56.5km로 가장 거리가 멀다. 문화시설까지의 평균 이동시간은 96.5분으로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40분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동 수단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2.8분, 승용차 이용 시에는 47.9분으로 승용차가 5.1분이 더 걸렸다. 권역별로

는 전북 군산시가 157.8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다. 문화시설까지의 평균 소요 비용은 1회 편도 기준으로 33,557원이며, 대중교통 이용 시 1,549원, 승용차 이용 시 30,753원으로 택시 등의 승용차를 이용할 때 가 대중교통에 비해 29,204원 더 지출했다. 권역별로는 전남 부안군이 45,633원으로 가장 비용을 많이 지출했다.

연간 운영 지역문화행사 프로그램 수는 서해권역별 충청남도가 295회, 전라북도가 153회로 두 지역 모두 월 1회 기준을 달성하였다. 분기별 전문 공연 프로그램은 1회 이상 운영은 모두 기준을 달성했다.

〈표 2-15〉 문화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km, 분, 원

유인도서		이동거리	이동시간			소요비용		
			평균	대중교통	승용차	평균	대중교통	승용차
합계		42.1	96.5	42.8	47.9	33,557	1,549	30,753
충남	당진시	32.9	67.0	62.2	52.0	37,750	1,900	35,500
	보령시	40.3	74.5	15.3	18.7	30,072	1,500	26,964
	서산시	30.3	68.2	49.7	48.2	33,492	1,633	32,892
	서천군	24.5	66.3	38.9	36.3	18,500	2,950	18,500
	태안군	43.9	86.4	54.5	53.9	39,300	2,375	38,400
	홍성군	30.6	66.1	56.8	51.1	39,233	1,400	34,633
전북	고창군	30.4	61.2	35.4	29.7	41,233	2,850	41,233
	군산시	49.4	157.8	61.7	59.5	30,028	1,550	25,250
	부안군	56.5	124.7	65.1	65.8	45,633	950	43,600

주: 평균 소요비용은 1회 편도 기준

자료: 저자작성

〈표 2-16〉 문화 프로그램 및 공연 운영 현황

단위: 개

구분	문화 프로그램			공연		
	문화시설 수	연간 운영	프로그램 /월	문화시설 수	연간 운영	공연/분기
합계	10	448	37.33	12	316	80
충청남도	8	295	24.58	8	190	48
전라북도	2	153	12.75	4	126	32

주: 프로그램/월은 1개월 당 평균 문화 프로그램 운영 횟수, 공연/분기는 분기 당 평균 공연 횟수임
자료: 저자작성

4) 도서관

국공립도서관(작은 도서관 포함)을 이용할 수 있다.

(1) 평가 방식

도서관 항목은 서해권역 유인도서 및 유인도서와 연계된 육지의 기항지를 출발지로 지정하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의 전국도서관 주소록 자료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위치 정보를 도착지로 지정하였다. 항목 측정은 ‘읍면 내 공공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여 평균 이동 거리, 평균 이동시간, 평균 소요 비용을 산출하여 달성 정도를 평가했다.

이동 거리는 해상의 경우 여객선 및 도선의 운항 거리, 육지의 경우에는 기항지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이동 수단별로 운행 거리를 적용하였다. 이동시간은 해상의 경우 운항 시간, 육지의 경우 이동 수단별 소요 시간을 적용하였다. 소요 비용은 해상은 선박 운임을 적용하고, 육지는 이동 수단별 운임을 적용하였다.

접근성 개념을 적용한 도서관 항목의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는 10분으로 이내에 도착하게 되면 섬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

다. 도서관의 범위는 해당 유인도서가 있는 읍면 단위에 소재한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이 대상이다. 평가에 적용된 도서관은 총 67개소로 일반 공공도서관 37개소, 작은도서관 30개소이다.

〈표 2-17〉 유인도서 읍면별 공공 도서관 분류

단위: 개

지역		일반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충남	당진시	2	2
	보령시	12	12
	서산시	3	3
	서천군	1	1
	태안군	2	1
	홍성군	1	1
전북	고창군	1	
	군산시	9	9
	부안군	6	1

주: 가파도, 마라도는 동일 기항지를 이용해 일반 공공도서관 합계가 실제 수와 차이가 발생함
자료: 저자작성

(2) 평가 결과

섬 주민이 도서관까지 가는 평균 이동거리는 36km이다. 해상의 평균 이동거리는 16.8km, 육지에서의 평균 이동거리는 19.2km이었다. 권역별는 전북 부안군이 57.5km로 가장 길었는데, 섬 내 작은도서관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도서관까지 평균 이동시간은 93.5분으로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10분을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동 수단별로 살펴보면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38.8분, 승용차 이용 시에는 35.8분으로 대중교통이 3분이 더 걸렸다. 권역별로는 전북 고창군이 161.7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다.

도서관까지 평균 소요비용은 1회 편도기준으로 24,672원이며, 대중

교통 이용 시 1,456원, 승용차 이용 시 21,639원으로 승용차 이용 시 대중 교통에 비해 20,183원 더 지출했다. 권역별로는 전북 부안군이 42,629원으로 가장 비용을 많이 지출한 반면, 충남 서천군이 6,750원으로 가장 적은 비용을 지출하였다.

〈표 2-18〉 도서관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km, 분, 원

유인도서		이동거리	이동시간			소요비용		
			평균	대중교통	승용차	평균	대중교통	승용차
합계		36.0	93.5	38.8	35.8	24,672	1,456	21,639
충남	당진시	39.7	47.0	39.9	32.0	27,300	1,500	25,050
	보령시	31.0	62.7	28.3	24.8	20,775	1,500	17,667
	서산시	28.1	46.3	27.6	26.3	19,183	1,500	18,583
	서천군	12.3	43.5	14.3	13.2	6,750	1,550	6,750
	태안군	20.1	55.5	26.1	25.5	20,033	1,583	18,833
	홍성군	26.4	58.3	42.6	43.3	35,200	1,400	30,600
전북	고창군	24.1	161.7	56.6	41.7	28,200	950	28,200
	군산시	43.1	146.2	49.6	47.9	25,528	1,550	20,750
	부안군	57.5	161.2	65.8	60.5	42,629	950	40,171

주1: 평균 이동시간, 평균 소요비용은 여객선 및 도항선 이용을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임
 주2: 평균 소요비용은 1회 편도 기준
 자료: 저자작성

5) 체육시설

생활 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1) 평가 방식

체육시설 항목은 ‘시군 내 생활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하여 달성정도를 평가했다. 서해권역 유인도서 및 유인도서와 연계된 육지의 기항지를 출발지로 지정하고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체육시설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의 평균 이동 거리, 평균 이동시간, 평균 소요 비용을 측정했다.

접근성 개념을 적용한 체육시설 항목의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는 30분으로 이내에 도착하게 되면 섬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동 거리의 경우 해상은 여객선 및 도선의 운항 거리, 육지는 기항지에서 체육시설까지의 거리를 이동 수단별로 운항 거리를 적용하였다. 이동시간은 해상은 운항 시간, 육지는 이동 수단별 소요 시간을 적용하였다. 소요 비용은 해상의 경우 선박 운임을 적용하고, 육지의 경우에는 이동 수단별 운임을 적용하였다.

섬어촌서비스기준에 해당하는 공공체육시설에는 생활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⁵⁾으로 본 평가의 범위는 관내 소재한 공공체육시설이 대상이다. 2021년 현재 서해권역 공공체육시설로는 총 80개소로 생활체육관이 55개소, 수영장 16개소, 간이운동장이 9개소이다.

5) 간이운동장은 축구, 배구, 농구, 테니스, 배드민턴, 게이트볼, 체력단련기구 등의 간이운동시설이 설치된 거주지 인근의 마을체육시설을 말함.

〈표 2-19〉 유인도서별 공공체육시설 분류

단위: 개

	지역	생활체육관	수영장	간이운동장
충남	당진시	14	-	1
	보령시	12	-	6
	서산시	3	-	-
	서천군	1	-	-
	태안군	2	-	-
	홍성군	-	-	-
전북	고창군	9	1	-
	군산시	18	9	2
	부안군	-	6	-

자료: 저자작성

(2) 평가 결과

체육시설까지의 평균 이동 거리는 42km다. 권역별로는 전북 부안군이 평균 57km로 가장 멀었다. 체육시설까지 평균 이동시간은 119.2분으로 국가 최소기준 목표치 30분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동 수단별로는 대중교통 이용 시 63.2분, 승용차 이용 시 57.8분으로 대중교통이 5.4분이 더 걸려 이동 수단별, 권역별로 편차가 존재한다. 권역별로는 충남 보령시가 평균 27.8분으로 목표를 달성한 반면, 전북 군산시는 80.5분으로 가장 오래 걸렸다. 체육시설까지 평균 소요 비용은 1회 편도기준 38,411원이며 대중교통 이용 시 1,832원, 승용차 이용 시 36,404원으로 승용차 이용 시 대중교통에 비해 34,572원 더 많이 지출했다. 권역별로는 전북 고창군이 53,100원으로 가장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다.

〈표 2-20〉 체육시설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km, 분, 원

유인도서	이동거리	이동시간			소요비용		
		평균	대중교통	승용차	평균	대중교통	승용차
평균	42	119.2	63.2	57.8	38,411	1,832	36,404
충남	당진시	48	85.0	65.1	38,429	1,557	36,714
	보령시	35	64.5	27.8	27,050	1,500	25,738
	서산시	33	76.1	43.7	31,900	1,500	30,700
	서천군	21	-	49.3	18,867	3,250	18,867
	태안군	34	108.2	72.6	41,750	3,430	40,850
	홍성군	28	61.2	52.0	36,000	1,400	31,400
전북	고창군	37.7	-	79.8	53,100	2,850	52,275
	군산시	47	188.6	80.5	42,406	1,883	37,739
	부안군	57	112.5	68.1	42,600	1,425	41,500

주1: 평균 이동시간, 평균 소요비용은 여객선 및 도항선 이용을 포함하여 산출한 결과임

주2: 평균 소요비용은 1회 편도 기준

자료: 저자작성

4. 정주여건 부문

1) 주택

농어촌 주민 누구나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에서 거주한다. 석면 소재 슬레이트 주택지붕은 철거 혹은 개량한다.

(1) 평가 방식

주택 항목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군별 농어촌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본 연구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소재 주택 철거 실적을 추정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측정 방법은 서해권역에 대한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표제부 자료와 환

경부 제공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및 연도별 석면 슬레이트 소재 주택 철거 실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2014년 기준 노후 슬레이트 주택 수와 2022년 기준 유인 도서별 주택 수, 빈집 수, 노후 슬레이트 주택 수 변화 비율을 측정하였다.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비율 23%로 이 이상이면 주택 항목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2022년 자료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서해권역 충남지역과 전북 지역을 조사하였다.

(2) 평가 결과

2014년 서해권역 충남지역과 전북 지역 유인도서의 석면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는 497채였으며, 2022년 7월 현재 슬레이트 소재 주택 수는 533채로 조사되었다. 주택 항목의 석면 슬레이트 주택 철거 비율은 -7.21%로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23%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권역별로는 충남지역 홍성군이 주택 항목의 서비스기준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나머지 지역들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표 2-21〉 주택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채, %

구분		석면 슬레이트 소재 주택		슬레이트 주택 철거 비율
		2014년	2022년	
합계		497	533	-7.2
충남	당진시	42	42	0.0
	보령시	12	70	-483.3
	서산시	17	15	11.8
	서천군	2	2	0.0
	태안군	13	12	7.7
	홍성군	2	1	50.0
전북	고창군	0	0	-
	군산시	133	128	3.8
	부안군	276	263	4.7

자료: 저자작성

2) 상수도

주민 누구나 상수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다.

(1) 평가 방식

상수도 항목은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는 85%를 넘으면 상수도 항목 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측정을 위해 환경부가 제공하는 상수도통계의 급수인구현황자료를 활용하여 서해권역 도서지역 주민등록인구 대비 도서지역의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2) 평가 결과

서해권역 도서지역 주민등록인구는 5,801명이며, 도서지역 광역 및 지방 상수도 급수인구도 1,525명이다. 상수도 달성 정도는 26.3%로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85% 서비스기준을 넘지 못하여 달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서해권역 시군별 도서별 급수인구는 충남지역의 경우 당진시 232명, 서산시 200명이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상수도 급수인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지역의 경우 부안군 1,093명 제외하고 나머지 고창군과 군산시에는 상수도 급수인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2〉 상수도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명,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수	상수도 급수인구	상수도 비율
합계		5,801	1,525	26.3
충남	당진시	198	232	117.17
	보령시	1,908	-	-
	서산시	172	200	116.3
	서천군	77	-	-
	태안군	90	-	-
	홍성군	62	-	-

전북	고창군	51	-	-
	군산시	1,967	-	-
	부안군	1,276	1,093	85.6

자료: 저자작성

3) 하수도

농어촌 어디에서나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평가 방식

하수도 항목은 ‘읍면 지역 총인구 대비 공공하수처리 인구 비율’을 측정하여 달성정도를 평가했다. 환경디지털도서관의 하수도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서해권역 충남지역과 전북 지역 유인도서의 하수처리장을 조사하고 서비스기준을 평가하였다. 하수도 항목의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는 76%로 이상이면 섬어촌서비스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2) 평가 결과

서해권역 유인도서가 소재한 9개 읍면의 총 인구는 57,572명, 공공하수처리인구는 32,822명, 공공하수처리구역 인구보급률 57%로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76% 서비스기준을 넘지 못하여 달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충남 당진시 석문면, 서산시 지곡면, 태안군 안면읍, 홍성군 서부면과 전북 고창군 부안면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해 관련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3〉 하수도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공공 하수처리 인구	공공하수 처리구역 인구보급률
합계		57,572	32,822	57.0
충남	당진시	9,141	2,660	29.1
	보령시	2,125	3,416	160.7
	서산시	115,02	6,078	52.8
	서천군	110,94	10,826	97.6
	태안군	13,757	7,353	53.4
	홍성군	3,144	763	24.2
전북	고창군	2,516	1,726	68.6
	군산시	3,186	-	-
	부안군	1,107	-	-

자료 : 저자작성

4) 난방

읍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도시가스 보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등 난방비 저감정책을 추진한다.

어촌 지역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등 정부의 지원으로 인해 난방 여건은 많이 개선되었으나 도시가스 보급이 여전히 어려운 지역이 많아서 소형 LPG 저장탱크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는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 가구비율을 보완지표를 난방 항목 측정 지표로 사용하였다.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는 68%로 그 이상이면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도시가스 보급 가구비율은 도시가스협회,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가구비율은 한국LPG산업협회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 불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5) 대중교통

마을 내에서 대중교통을 하루 3회 이상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은 농어촌 교통수단을 도입한다. 도서지역의 경우 모든 본도에 1일 왕복 1회 이상의 여객선이 운항된다.

(1) 평가 방식

대중교통 항목은 법정리별 버스 운행 횟수가 일일 3회 이상 이용 가능하게 달성정도를 평가했다. 서해권역 유인도서 소재 법정리 가운데 일일 버스 운행 3회 이상인 법정리 수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수요부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시행 여부 및 도서지역 여객선 운항 여부를 측정하여 대중교통 항목 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하였다. 자료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빅데이터거래소 제공한 버스노선 및 버스 정류장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평가하였다.

(2) 평가 결과

서해권역 시군별 유인도서의 법정리 수는 총 27개이다. 이 가운데 전북 부안군 대리, 진리, 치도리에서 3개 법정리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일일 버스운행 비율은 11.1%로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농어촌교통수단을 도입한 수요응답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도서 지역은 충남 당진시, 보령시가 있으며, 전북지역에는 부안군이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37개 섬 대상 여객선 운항 여부를 확인한 결과 32개 섬이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고, 운행 비율은 86.5%로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100%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본도의 경우 여객선 운항 및 버스 운행 등 대중교통 프로그램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규모가 작은 도서지역은 버스 운행 여건이 어려워 준대중교통 프로그램 도입 등 농어촌 교통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2-24〉 대중교통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개, 회

유인도서	버스			농어촌 교통수단	여객선	
	법정리 수	운행 여부	일일운행		종류	일일운행
합계	27	-	-	-	-	-
충남	당진시	1	X	-	○	여객선 3
	보령시	3	X	-	○	여객선 2
	서산시	3	X	-	X	여객선 3
	서천군	1	X	-	X	사선 -
	태안군	2	X	-	X	여객선 3
	홍성군	1	X	-	X	여객선 5
전북	고창군	1	X	-	X	사선 -
	군산시	7	X	-	X	여객선 2
	부안군	8	○	7	○	여객선 4

자료 : 저자작성

6) 생활폐기물

행정리 내에서 영농·생활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평가 방식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의미한다. 또한 폐기물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는 것으로 대기나 수질과 더불어 대표적인 환경문제 중의 하나이다. 영농폐기물은 생활쓰레기로 분리되어 직접 분리배출이 가능하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의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며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인 소각시설, 최종처분시설인 매립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의미한다.

이처럼 생활폐기물 항목은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는 100%로 이를 충족해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료는 기초지자체 행정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어촌에서는 어구의 유실 및 폐기로 인해 폐어구가 발생하고 이는 유령어업, 산란장 훼손, 어장환경 오염 등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수산자원을 감소시키면서 어업인의 소득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폐어구는 시행규칙상 사업장폐기물에 속하나, 일일 300kg 미만은 생활쓰레기로 배출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서해권역 유인도서 내 생활폐기물 처리장 및 시설이 있는 행정리 비율을 조사하여 평가하였다.

(2) 평가 결과

서해권역 유인도서의 행정리 수는 총 27개이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는 폐기물 매립시설, 소각시설은 전체 4개이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항목의 서비스기준 달성정도는 14.8%로 국가최소기준 목표치 100%를 달성하지 못했다.

7) 방법설비

범죄 예방을 위해 마을 주요지점과 주요 진입로의 방법용 CCTV를 설치한다.

(1) 평가 방식

정주여건 부문 중 방법설비의 달성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방법용 CCTV를 설치한 행정리의 비율을 측정하였다.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는 60%로 이를 상회하면 방법설비 서비스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위해 자료는 2022년 서해권역 방법용 CCTV 현황 및 지리정보서비스 매칭 결과와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2) 평가 결과

방법설비 항목의 서비스 기준 달성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해권역인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의 방문 유인도서의 행정리 수와 방법용 CCTV 수를 집계하였다. 그 결과 대상 행정리는 245개이며, 방법용 CCTV가 설치된 행정리는 총 85개이다. 따라서 달성정도는 34.6%로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를 하회하고 있었다.

〈표 2-25〉 방법설비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개, %

유인도서			행정리	CCTV 설치 행정리	카메라 총계	달성정도
합계			245	85	1,235	34.6
충남	당진시	석문면	19	7	144	36.8
	보령시	오천면	22	10	74	45.5
	서산시	지곡면, 팔봉면	44	18	190	40.9
	서천군	장항읍	22	11	299	50.5
	태안군	안면읍, 근흥면	43	14	272	32.6
	홍성군	서부면	29	12	201	41.4
전북	고창군	부안면	37	10	44	27.0
	군산시	옥도면	18	1	2	5.6
	부안군	위도면	11	2	9	18.2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평가, 2021.

8) 경찰순찰

주민이 요청하는 순찰 시간·장소에 대하여 1일 1회 이상 탄력 순찰을 실시한다.

경찰순찰 항목은 농어촌 지역에서 순찰 장소·시간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요청을 반영한 탄력적인 방식으로 1일 1회 이상 순찰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측정한다. 그러나 경찰청의 자료 미협조로 달성 정도의 평가가 불가하다.

9) 소방출동

화재 발생 신고 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 목표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한다.

소방출동 항목은 섬어촌 지역에 화재 발생 신고접수 후 소방차가 지역별로 정해진 목표 시간 이내에 화재 발생 장소에 도착하는 비율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광역시도 소방본부 일일소방종합상황 보고를 활용하고 해당 도서 지역 관할 읍면 119센터 및 지역센터의 화재 대응 실적을 추적하여 달성 정도를 판단한다.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는 70%로 이상이면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소방청의 자료 미협조로 달성 정도의 평가가 불가하다.

5. 경제활동 부문

1)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시군내에서 사업체 창업·취업에 관한 전문적인 컨설팅 또는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 평가 방식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항목은 시도 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구직 관련 전문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통해 달성 정도를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지원센터의 유무, 전담 인력 유무,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로 판단한다. 창업지원센터는 창업 아이템 교육과 사업체 운영 방안에 대한 교육서비스 지원을 의미한다. 일자리지원센터는 구직상담 및 구직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 알선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원에 관한 전문적

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유무는 전담 인력의 고용 여부를 의미한다.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는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의 종류 및 연간 운영 횟수를 의미한다. 국가최소기준 목표치는 시도 내 창업 및 사업체 운영, 취업 관련 전문프로그램 연간 운영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기준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는 서해권역 창업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센터에 대한 전화조사 및 면담조사를 활용하였다.

(2) 평가 결과

평가대상이 되는 서해권역 내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시설은 총 13 개소로 연간 전문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파악할 수 없는 전북 지역을 제외한 충남지역을 대상으로 평가를 수행하였다.

전담 인력 고용은 충남 당진시를 제외하고 평가대상 모든 기관에서 전담 인력을 고용하고 있지 않다. 연간 프로그램 운영은 창업지원만 7회에 이르고 일자리지원센터의 경우 충남 당진시를 제외하고 연간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업체를 포함한 이용자는 30명(업체)에 이른다. 달성정도 평가에서 연간 1회 이상 창업·취업 관련 전문 프로그램 운영 비율은 78%로 국가최소기준 86% 목표치에 미달하였다.

〈표 2-26〉 창업·취업 관련 컨설팅·교육 항목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단위: 회

시도	센터명	전담인력 고용 유무	전문프로그램	프로그램 연간 운영	연간 이용자
충청 남도	창업보육센터	O	제조, 식품, 지식서비스, 해양, 항공	7	24
	일자리지원센터	O	구인상담, 취업알선, 취업교육	7	30
전라 북도	창업보육센터	-	제조업, IT, IoT융합, 부품	-	-
	일자리지원센터	O	구인상담, 취업알선, 취업교육	-	100

주: 연간 이용자는 사업체를 포함함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평가, 2021.

03

현장체감과제 발굴

제1절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해권역인 충청남도과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5개의 유인도서⁶⁾이다. 해당 도서는 인구 밀집도가 낮아 일부 생활서비스를 육지에 의존하게 되며, 자족적인 생활 영위에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내용적 범위는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의 4대 정책부문으로 한정하여 삶의 질 여건과 실태를 조사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대상 지역의 이슈 등 주요 현황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장조사는 지역의 어업인, 주민, 기타 관계자 등의 면담으로 현안을 청취하였다. 면담은 조사목록을 기반으로 하되 파생되는 주제를 자유롭게 논의하는 반구조화 면접 방식을 채택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9월 27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각 항목별 여건과 문제진단, 정책 수요 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서 도서지역의 공통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 제시 및 삶의 질 정책화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다.

6) 충청남도(녹도, 고파도), 전라북도(개야도, 연도, 비안도)

제2절 서해권역 도서지역 현장실태

1. 충청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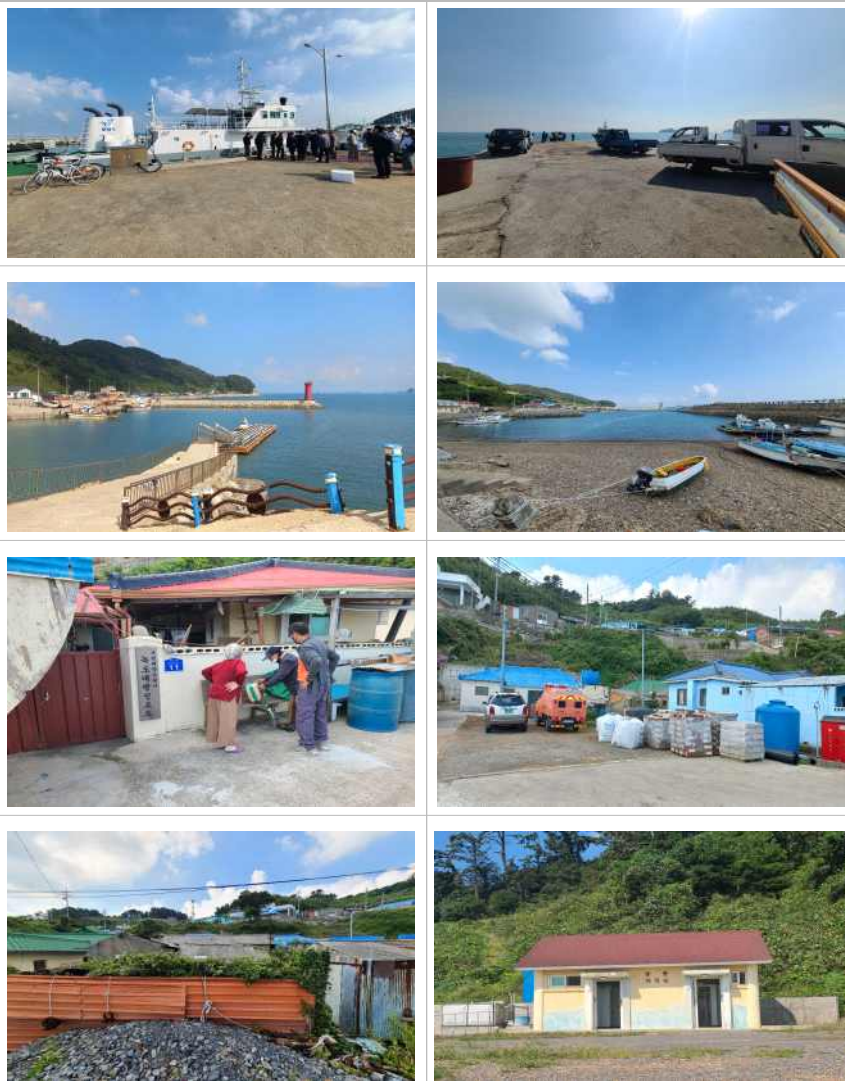
1) 녹도

녹도는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에 속하며, 109세대, 180명이 거주하는 섬이다. 2022년 10월 6일 어촌계장과 마을이장, 섬 관계자, 보령시 공무원들과 면담을 통해 현장실태 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제는 4대 정책부문에 근거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작은 학교 확대 방안, 1일 1운항 및 항로 폐쇄 우려 문제 등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표 3-1〉 녹도 조사개요

구분	내용	
개황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0.398km ² /109세대/180명	
조사일정/면담	2022.10.6.(목) 13:00~15:00/1건/마을리더(이장, 어촌계장), 마을주민 등	
주요내용	보건·복지	•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
	교육·문화	• 작은학교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정주기반	• 1일 1운항 및 항로 폐쇄 우려 문제
	경제활동	-
전경		

〈그림 3-1〉 녹도 현장사진



자료: 저자 촬영

(1) 보건·복지 부문

가. 의료서비스 접근성

녹도는 보건진료소 1개소가 있으며, 보건진료소에서는 경미한 질병에 대한 진료가 가능하다. 주민이 높은 수준의 진료를 원하거나 응급의료가 필요한 상황에는 마을 내 헬기장을 활용하여 육지로 이송하게 된다. 기존의 의료지원정책 범위는 육지 보건소로 국한된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이로 인해 정부는 도서·벽지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⁷⁾ 등을 배치하고 있으나, 인구 대비 헬기 운영 병원 수가 적어 진료 골든타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림 3-2〉 녹도 보건의료기관 및 헬기 이·착륙장

녹도 보건진료소	헬기 이·착륙장
	

자료: (좌)저자 촬영, (우)네이버 블로그(<https://m.blog.naver.com/elkjbc/222696691187>)

(2) 교육·문화 부문

가. 작은학교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녹도는 청파초등학교 호도분교 녹도학습장 1개소가 있다. 2006년 녹도분교가 폐교된 이후 2017년 작은 학교 형태인 녹도학습장이 부활하게 된다. 녹도학습장에는 유치원생 4명을 포함한 8명의 전교생이 재학 중이며, 도서

7) 전국 78개 거점병원에 닥터 헬기 배치하여 중증 응급환자 이송에 기여함 (2017년 기준)

지역에 작은 학교를 신규 설치 및 유지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 미비하고, 본교인 청파초등학교로 현장학습을 진행할 시 해상교통 이용의 불편함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기초교육시설 인근 최소 안전시설 설치, 본교와의 원활한 교류 여건 마련 등 재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정주기반 부문

가. 여객선 운항 횟수

대천항~호도~녹도~외연도 노선 여객선이 하루 2회에서 1회로 감편 운항하면서 주민의 일일생활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업무 및 현장학습 등의 목적으로 출도하는 주민은 불가피하게 육지 체류가 필요하며, 기상악화와 선박 고장으로 여객선 결항이 발생할 때는 입도일이 변동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해운회사 측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운항 횟수를 감소한 상황으로 여객선 운항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이 팽배하다. 이에 주민과 해운회사, 지자체 간 면담을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개선 방향성 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의 일일생활권 보장을 위해서는 도내 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항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예컨대, 여객 운항지원금 근거 마련 등 제도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8) 2022년 12월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해운회사의 주 수익원이 급감하고 유류비 등 운항원가의 증가로 대천항과 섬 간 운항 횟수가 감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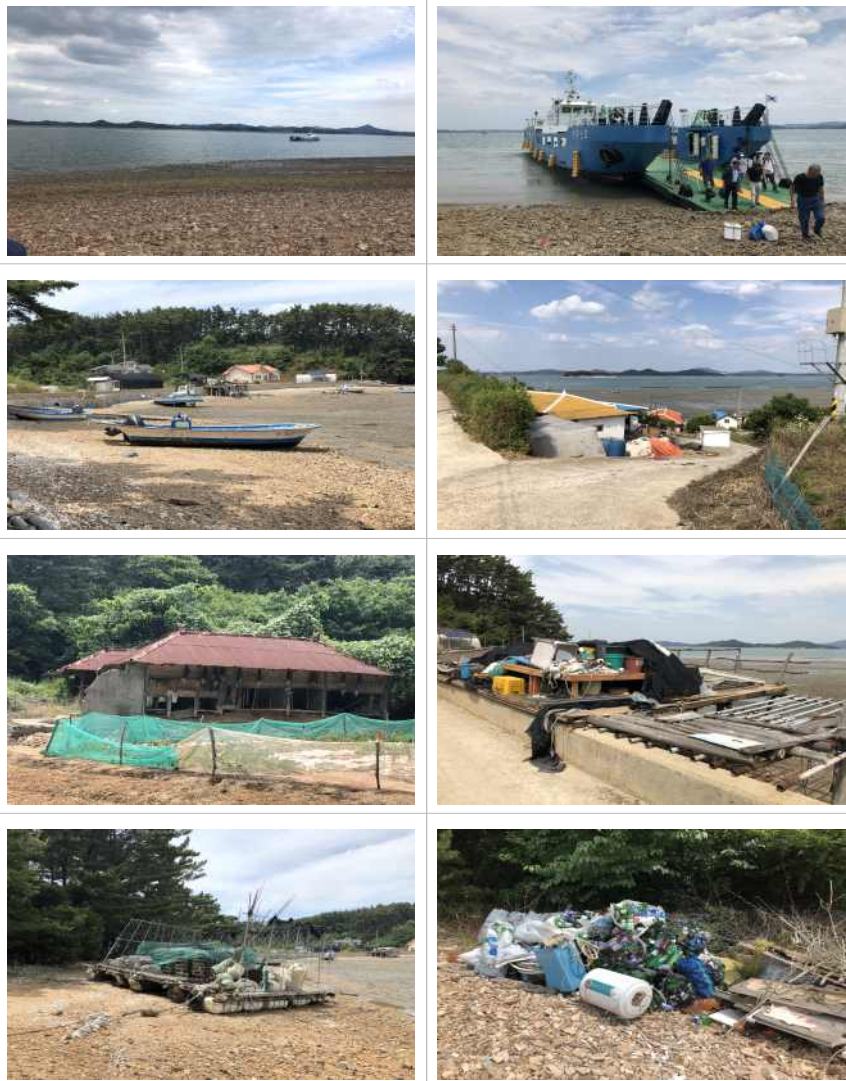
2) 고파도

고파도는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에 속하며 73세대, 123명이 거주하고 있다. 2022년 10월 7일 고파도 마을이장 내외와 면담을 진행하여 도서지역 현안을 청취하였다. 고파도에서 논의되는 주요 안건은 의료서비스 접근성, 가로림만 일대의 오·폐수 정화시설 개선, 마을 내 침식 위험 구간 개선, 마을사업 추진과정에서 어촌계 간 갈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표 3-2〉 고파도 조사개요

구분	내용	
개황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고파도리/1.043km ² /73세대/123명	
조사일정/면담	2022.10.07.(금) 14:00~16:50/1건/마을이장, 섬 관계자	
주요내용	보건·복지	• 의료서비스 접근성
	교육·문화	-
	정주기반	• 가로림만 일대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필요 • 마을 내 침식 위험구간 개선 필요
	경제활동	• 어촌계 사업추진 애로사항
전경		

〈그림 3-3〉 고파도 현장사진



자료: 저자 촬영

(1) 보건·복지 부문

가. 의료서비스 접근성

고파도 내에는 보건진료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전무하여 주민들은 진료를 위해서 관할구역인 팔봉면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보건진료소의 대체 수단으로서 한 달에 1회 병원선을 통해서 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있다. 주민들이 위급한 의료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응급의료 전용헬기인 닥터헬기를 이용하거나 배편을 이용하게 된다. 의료 격차 완화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방편은 마련되고 있으나 야간 및 기상악화에 대처하기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2) 정주기반 부문

가. 하수처리시설 개선

태안반도 북쪽 해안의 가로림만 일대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없고 오·폐수가 무단으로 방류되면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한다. 일상생활의 오·폐수는 하천의 자연정화 작용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인위적인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인근 화학공단은 고파도의 어족자원 감소와 백화현상에 일정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수처리시설은 해양환경, 수산자원과도 밀접한 사안으로 시설 확충, 제도 개선 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나. 마을 내 침식 위험구간 개선

고파도는 해풍과 해파로 인한 침식 및 낙석이 발생하여 마을 내 다수의 위험 구간이 존재한다. 주민 안전을 위해 침식 구간을 석축 공사로 보완하고 길을 정비하려는 요구는 높으나 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를 도시종합개발사업 등과 연계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고파도의 행정

구역상 사업선정 기준을 벗어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서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선정기준에 적합한 재정사업을 홍보하고 컨설팅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3-4〉 고파도 기반 여건

도로 통행 여건	침식 구간
	

자료: 저자 촬영

(3) 경제활동 부문

가. 어촌계 사업추진 애로사항

고파도는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 마을 내 고령층은 수산물 생산·판매과정의 공동협력 체계 구축과 양식장 개방을 통한 관광객 유입 촉진 등 공동사업을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파도 어촌계는 외지인에 대한 폐쇄성 외에도 신규 어장에 대한 어촌계원 간 갈등도 발생하면서 일원화된 견해가 부족하다. 기존 마을어장을 조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일부 텃세가 존재하면서 마을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규사업과 외지인에 대한 폐쇄성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2. 전라북도

1) 개야도

개야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에 속하며, 333세대, 777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현안청취를 위해서 어촌계장과 마을이장 및 마을주민을 면담하였으며, 2022년 9월 27일 현장을 방문하였다. 주요 주제는 주거 환경 개선, 어업 여건 개선 등이 논의되었다.

〈표 3-3〉 개야도 조사개요

구분	내용	
개황	전북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리/2.18km ² /333세대/777명	
조사일정/면담	2022.09.27.(월) 10:00~13:20/2건/어촌계장, 마을이장, 마을 주민	
주요내용	보건·복지	-
	교육·문화	-
	정주기반	• 주거환경 개선
	경제활동	• 어업생산기반 여건 개선
전경		

〈그림 2-5〉 개야도 현장사진



자료: 저자 촬영

(1) 정주기반 부문

가. 주거환경 개선

개야도는 노후된 주택과 주거공간 인근에 방치된 폐어구, 쓰레기 등으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열악한 편이다. 이는 비단 주민의 정주환경 불만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과 연관되는 문제이다. 현지 주민과의 면담결과에 따르면 쓰레기 및 폐어구가 도로를 점유하는 경우도 다수로서 어업지역 배후의 관광자원도 일정 부분 활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림 3-6〉 개야도 주거환경 현황



자료: 저자 촬영

(2) 경제활동 부문

가. 어업생산기반 여건 개선

개야도 어항은 군산 소재 어항 중 가장 큰 어선 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부족한 접안시설, 상시 접안 불가 등으로 어업인들의 불편이 극심한 상황이다. 개야도는 어항 부지가 협소하여 어구 등의 도로 점유로 인한 통행 불편 및 미관 저해의 문제점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수산업 활동에 필요한 어업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민들이 제한적으로 어업 환경을 이용하게 되면서 지속적인 시설 확충 요구가 개진되었다. 이에 2019년 개야도항을 국가어항으로 신규 지정하여 수산물 생산거점 어항으로 개발하려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요컨대, 주민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국가예산 사업을 연계하고, 향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발굴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림 3-7〉 개야도 어업생산기반 여건

도로 점유 현황	어항 여건
	

자료: 저자 촬영

2) 연도

연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에 속한 섬으로 총 82세대, 182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2022년 9월 28일 마을을 방문하여 이장 및 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을 청취하였다. 주요 주제는 분교 폐교 이후 활용 한계와 폐가 및 쓰레기 문제, 석유·가스 수급 문제 등 정주기반 부문의 요구가 중점적으로 도출되었다.

〈표 3-4〉 연도 조사개요

구분	내용	
개황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연도리/0.89km ² /82세대/182명	
조사일정/면담	2022.9.28.(수) 10:00~14:20/4건/마을이장, 어촌주민	
주요내용	보건·복지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한계
	교육·문화	• 분교 폐교 이후 활용 한계
	정주기반	• 폐가 및 쓰레기 문제 • 생활서비스(연료, 가스 수급 등) 불편
	경제활동	-
전경		

〈그림 3-8〉 연도 현장사진



자료: 저자 촬영

(1) 보건·복지 부문

가. 의료 서비스

연도는 보건진료소 1개소가 있으며, 기타 도서지역이 직면한 의료 접근성 불평등의 문제를 가진다. 보건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높으나 고립성으로 인해 보편적 의료 보장이 어렵고, 긴급의료 상황에 대한 대처가 취약하다. 따라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민간의료시설의 질적 향상, 의료서비스 불편 해소, 진료과목의 확대 등의 개선 요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2) 교육·문화 부문

가. 분교 폐교 이후 활용 한계

연도의 초등교육시설인 어청도초등학교 연도분교는 2003년 폐교된 이후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교육·문화 부문에서 소규모 섬은 학생이 없을 경우 대부분 폐교되는 수순을 거치는데, 주민들의 수요에 비해 이를 적절히 활용한 사례는 적다. 2010년 이후 전북도교육청은 폐교재산을 매각하기보다는 교육실습장, 체험학습장 등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서 폐교된 분교를 문화거점으로 재생하는 지원사업 등이 필요해 보인다.

(3) 정주기반 부문

가. 폐가 및 쓰레기 문제

연도는 마을 내부 다수의 폐가가 존재하고 이를 원활히 철거 및 개량하지 못하면서 열악한 정주 환경 여건이 조성되었다. 빈집과 폐가가 장기적으로 방치될 경우 쓰레기 적치 문제, 범죄, 붕괴 사고 등의 연쇄적인 문제점이

불거지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쓰레기의 적기 수거 한계로 인해 불법 투기 및 정주 환경의 질적 저하를 겪고 있다.

〈그림 3-9〉 연도 생활환경 현황

쓰레기 투기 문제	폐가
	

자료: 저자 촬영

나. 석유·가스 수급 문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도서지역은 난방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게 된다. 유인도서는 선박을 통해 주기적으로 LPG를 공급받지만, 기상악화 및 경제성의 이유로 정기 화물선이 다니지 않는 도서지역도 있다. 연도는 낮은 경제성을 이유로 약 2년간⁹⁾ 정기적인 연료 운반선이 도달하지 못한 지역으로 자체적인 공급방안을 구상해왔다. 가령,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화물선을 임대하여 비정기적으로 연료를 운송하거나, 주민이 개인 어선을 통해 가스를 운송하는 경우이다. 특히, 후자는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위법 행위로서 개선 요구가 크다. 최근 주민 삶의 질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시군이 공동으로 연료운반선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계적인 운항 횟수 증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 2016년, 2017년

3) 비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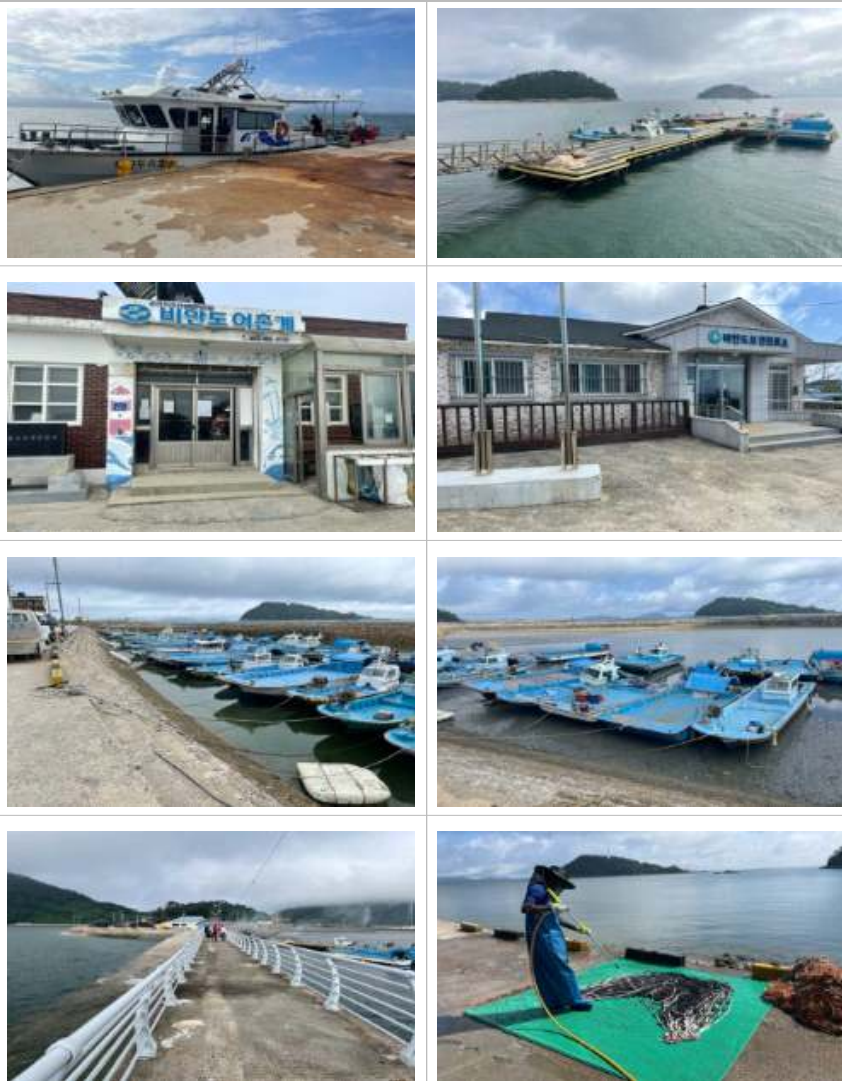
비안도는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에 속하며 145세대, 284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섬이다. 2022년 9월 29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어촌계장과 마을이장, 그리고 다수의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주요 논의된 주제는 보건·복지 부문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과 정주기반 부문의 생활서비스 및 도서지역 생활 여건을 범주화할 수 있다.

〈표 3-5〉 비안도 조사개요

구분	내용	
개황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리/1.52km ² /145세대/284명	
조사일정/면담	2022.9.29.(목) 09:00~14:00/2건/어촌계장, 마을이장, 어촌주민 다수	
주요내용	보건·복지	•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교육·문화	-
	정주기반	• 생활서비스 • 도서지역 생활 여건
	경제활동	-
전경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0〉 비안도 현장사진



자료: 저자 촬영

(1) 보건·복지 부문

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비안도는 보건진료소 1개소가 있으며, 공중보건의가 기본처방 업무를 수행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소방 헬기 등을 활용하여 육지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환자를 이송하며, 일반 상급병원 진료 시 주민들은 관할구역인 군산의 소재지로 이동한다. 공중보건의의 면담에 따르면 비안도 내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나, 뇌출혈과 절단 사고 등 골든타임을 요하는 질환은 보건진료소의 진료한계가 발생한다. 가령, 육지로 이송 전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수행하면서 적정 의료 시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의료서비스 불편이 야기된다.

(2) 정주기반 부문

가. 생활서비스

관할구역인 군산과 비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은 1일 3회 운항하면서 주민들은 육지에서 기초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군산 시내의 마트, 미용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여객선으로 운반이 어려운 짐들은 주민들의 개인 배를 활용하고 있다. 전자제품 수리를 위해서는 군산 내 서비스센터 직원의 출장 방문이 필요하며, 7일~30일가량 시간이 소요된다. 섬 내 서비스센터가 설치되지 않아서 기상 여건에 따라 직원의 입도가 불가할 경우 주민의 불편이 야기된다.

나. 도서지역 생활 여건

비안도에는 주택의 40~50% 슬레이트 지붕으로 주민의 정주 여건의 열악성¹⁰⁾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 내 폐가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철거 후 터만 남겨져 있는 상황이다. 한편, 상급학교로 진학한 가정은 군산과 비안도 내

거주지를 마련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가계의 경제적 부담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치된 빈집 철거, 슬레이트 지붕 정비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3-11〉 비안도 주택 및 공터 현황

주택 슬레이트 지붕	공터
	

자료: 저자 촬영

10) 2019년 1월부터 사용 금지된 건축 자재로 인체 유해성이 높음

제3절 정책부문별 현장체감과제 분석·발굴

1. 보건·복지 부문

현장체감과제 발굴을 위해 도서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부문별로 범주화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보건·복지 부문은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의 두 가지 현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첫째, 의료 공공성은 도시와 도서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와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섬 내에서도 전문화된 진료과목을 보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응급의료 지원체계의 한계로 응급환자 발생 시 적정시간 내 상급의료기관에 도달하기 힘든 여건이다. 공통적으로 도서지역은 헬기장 조성으로 응급상황에 대응하지만 기상 악화 등 취약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도서지역 인구 대비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병원 수와 관련 인력을 확충하는 등 응급의료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교육·문화 부문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소규모 섬 학교 살리기와 상급학교 진학 가정 지원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었다. 소규모 섬의 초등교육기관은 학생 수의 부족으로 통폐합의 대상이거나 복식수업 진행으로 학습경쟁력이 저하되는 환경에 직면한다. 또한, 육지의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가정은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해 이주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는 도서지역 측면에서 지역소멸과 연관되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독자적인 도서지역의 교육정책 추진, 통학 여건 개선 등 보편적인 학습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섬별 특화과제를 살펴보면 녹도는 작은 학교 확대 및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정주여건 부문

정주여건 부문에서는 첫째, 섬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 편의 개선이 필요하다. 섬 지역은 기상악화로 인한 결항 및 노선 감편으로 인해 일일생활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다. 주로 정기적인 업무, 현장학습 등 육지 체류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크다. 일부 섬의 경우 접안시설 미비로 차도선 운행을 통한 증편을 고려할 수 없는 실정으로 교통편 활성화 방안을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폐가와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개량이 필요하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향후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지원요소로 볼 수 있다. 셋째, 생활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함이 존재한다. 주로 육지 방문을 통해서 미용실, 마트, 병원 등 편의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생활서비스를 상시 이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를 섬별로 구분하면 비안도와 녹도는 해상 및 육상교통의 개선이 주요 정책 수요이며, 연도와 녹도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한다.

4. 경제활동 부문

경제활동 부문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업외 소득기반의 다양화를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마을공동사업에 대한 주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노령화로 인한 적절한 운영체계 구성도 힘든 실정이다. 청년층 유입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한 지역활성화로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서 연쇄적으로 마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외부인의 유입 및 지역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삶의 질 현장체감과제 발굴

4대 정책 영역인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활동 부문을 구분하여 섬 공통과제와 섬별 특화과제를 정리하면 아래 <표 3-6>과 같다.

<표 3-6> 정책부문별 현장체감과제

정책부문	섬 공통과제	섬별 특화과제
보건·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 어촌 의료 공공성 강화 • 응급의료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 접근성 확대 (녹도, 고평도, 비안도, 연도)
교육·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 학교 살리기 • 육지진학 가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학교(섬마을학습장) 확대 및 지원 (녹도)
정주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섬어촌 폐가,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 취약계층 생활서비스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마을 교통모델 운영(비안도) • 여객선 운항도서 도선 운영 규제 완화 (녹도) • 어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연도, 녹도)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원 활용 소득기반 다각화 • 섬어촌 활력 일자리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성 고려 지속가능한 일자리 지원 (연도)

04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본 연구는 섬 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접근성이 취약하고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전되는 등 섬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질 여건에서 도시와 사회경제적으로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섬 어촌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기준 달성정도를 평가하였으며, 대상지역은 서해권역 내 유인도서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섬어촌서비스기준 달성정도 평가는 섬 어촌을 대상으로 서비스기준 달성정도 평가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과 비교하여 국토 최외곽 지역의 실태 및 지역 특성별 서비스기준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른 4대 정책부문, 19개 핵심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념에 근거한 측정방법을 평가에 도입하였다. 점검 결과 19개 4개 항목은 관련자료 확보가 어려워 점진평가가 불가능하였으며 나머지 15개 항목 중 교육·문화 부문 평생교육만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외에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공공서비스 이

행실태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섬어촌에 대한 현장체감과제 발굴을 위해 5개 섬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부문별 공동과제와 특화과제를 발굴하였다. 공동과제는 의료체계 개선, 섬학교개선 및 육지진학시 지원,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폐가 및 슬레이트 주택 개량, 지역자원 활용 소득다각화, 일자리 창출 등이었다. 섬별 특화과제로는 대부분의 섬은 의료 접근성 확대, 녹도는 섬마을 학습장 지원확대, 도선 운영규제 완화 어가 주거환경 개선, 비안도는 교통체계 개편, 연도는 지역특성고려 일자리 지원 강화, 노후주택 개선 등의 과제가 발굴되었다.

서해권역 섬어촌의 생활서비스 기준 이행실태와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한 체감과제 발굴 결과 서비스기준 미달인 항목에 대해 현장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현장의 세부적인 대응과제도 도출할 수 있었다.

제2절 정책제언

본 연구를 통해 섬어촌의 실태를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의 결과를 도출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정밀한 진단과 과제 도출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계획이 필요하다.

우선, 섬어촌의 생활서비스기준 이행실태의 경우 여전히 어촌을 특화시킬 수 있는 기준이 부족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섬지역의 경우, 해상교통, 응급의료대응, 문화시설 등 해상을 통한 접근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며, 관련기관은 이와 관련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여 올해에 4개 항목에 대한 진단 및 평가가 불가능 하였다.

또한, 사업추진체계의 제약으로 권역별로 실태를 진단할 수 밖에 없으며 전국적인 조사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향후 관련 예산의 증액으로 조사대상이 확대 되었으나 매년 전국적인 조사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 및 조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현장체감형 과제부분에서도 권역별로 제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사체계(패널 구축 등) 및 계획을 수립하여 시계열로 자료가 확보될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위 두가지 사업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협조가 매우 필요하며 관련 자료확보 및 현장조하 협조를 통해 현장중심의 실태조사와 과제 발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농림축산식품부, 2016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6.

농림축산식품부, 2020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어촌지역소멸 시대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전략,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 방향, 국토 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

増田寛也, 지방소멸, 김정환 역, 와이즈베리, 2015.

성주인·김용욱·박자경, 『협업과 현장 공감으로 행복한 농어촌 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

송미령·성주인·김광선·조미형,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송미령·성주인·심재현·한이철·권인해, 『신 규형발전 전략과 과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 KREI 농정포커스, 2022.

일반사업 2022-15-02

서해권 섬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및 현장체감과제 발굴조사

인 쇄 2022년 12월 29일

발 행 2022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종 덕

발 행 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 소 49111 부산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연 락 처 051-797-4800 (FAX 051-797-481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비매품